

국민 목숨 살리는 안전매트는 더 두텁게, 지역필수의료와 지역사회 돌봄은 더 든든하게,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발표

-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 148조 7,697억 원 규모, 전년 대비 8.2%↑ -
- 아동기본수당·아이맞이지원금·피지컬AI(미래대응기금) 포함 152조 4,328억 원 -
-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(1.26조 원) 신설, 지역사회 통합돌봄 인착, 취약청년 지원-

보건복지부(장관 정은경)는 9월 1일(화),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. 총지출은 148조 7,697억 원으로 2026년 본예산(137조 4,949억 원) 대비 8.2% 증가하였다. 2027년에 신설될 미래대응기금*에 편성된 아동기본수당, 아이맞이지원금 등을 포함하면 152조 4,328억 원으로 10.9% 증가한 규모이다.

* (기획처 미래대응기금) 아동기본수당(2조 9,272억원), 아이맞이지원금(6,981억원), 피지컬AI 도입·실증(377억원) 총 3개 사업(3조 6,630억원)

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①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매트 강화, ②지역·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투자 확대, ③지역사회 통합돌봄 인착 및 모두의 돌봄 강화, ④아동·청년 등 미래세대 회복·성장 지원, ⑤보건복지 인공지능 전환(AI) 및 바이오혁신 등 5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하였다.

분야별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.

첫째,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 안전매트를 강화한다.

❶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맞춤형 급여 개편('15년) 이후 가장 큰 폭인 6.7% 인상*하고, 생계급여 수급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(2만 가구) 부양의무자 규정을 폐지한다.

* 월간 최대 생계급여액 5.5만 원(1인) ~ 13.9만 원(4인) 증가 (4인 가구: 월 207.8만 → 221.7만 원)

또한 중증장애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확대(+3만 명)하고,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본진료비 지원을 강화한다.(+13.8만 명)

②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중심의 두터운 지원을 위한 하후 차등지급*(348만 명), 부부감액 비율 축소(234만 명),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지원**(11만 명)을 반영하여 11% 예산이 증가('26년 23.1조 원→'27년 25.7조 원)하였다.

* (하위 0~30% 부부가구 차등 지급 시) 56만 원('26) → 68.4만 원('27), 최대 12.4만 원 추가지원
(하위 30~45% 부부가구 차등 지급 시) 56만 원('26) → 64.6만 원('27), 최대 8.6만 원 추가지원

** (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) '26년 0원 → '27년 하위 구간에 따라 최대 38만 원 추가지원

③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을 위해 자활사업 참여 규모를 7.5만 명까지 확대(7.2만→7.5만 명, +3천 명)하고, 자활급여도 3.7% 인상(일 3.52만~6.85만 원)한다.

④ 급박한 상황에 놓인 국민의 위기 해소를 위해 위기징후 포착 시 읍·면·동 현장에서 생계지원(30만 원)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하고, 금융연체 등 위기정보를 활용한 '고립통합대응시스템*'을 통해 고립위험군을 신속 발굴, 생애주기별 맞춤형서비스**를 연계·제공한다.

* 금융연체, 우울증 등 사회적 고립 위기정보를 입수·분석하여 발굴대상자를 선별하고, 지방 정부 공무원의 상담·판정·사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

** 공통안부확인, 청년마음일상회복, 중장년관계개선, 건강관리, 경제자립, 노인돌봄연계, 사회참여, 안전확인

⑤ 읍면동 공무원이 위기가구에 최초 방문상담 시 2.5만 원 상당의 생활물품을 지원하는 '찾아가는 희망드림꾸러미'를 도입하고, 생계가 어려운 국민의 기본 먹거리 보장을 위한 그냥드림 사업 전국 운영을 지원(150→300개소, 푸드뱅크·마켓 등)한다. 또한, 우수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도 신설한다.

⑥ 자살예방 상담전화 인력(150→200명) 및 자살예방센터 인력(센터당 5→7명, 전국 255개)을 확충하고, 현장 출동수당을 신설한다. 인공지능(AI) 기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24시간 자살 시도·사망 현황을 관리하는 '(가칭)국가자살대응실'을 신설한다.

⑦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 확대(1천 → 1.5천 명)와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확충(9→11개소)하고, 마약 투약사범(기소유예, 집행유예, 출소예정) 전담 절차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(수도권·비수도권 각 2개소)을 신규 도입한다.

둘째, 지역·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집중 투자를 확대한다.

①. 사는 곳에 관계없이 누구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「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(1.26조 원)」를 신설하여 ▲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게, ▲공공의료기관 우선 투자, ▲지방정부 자율성 강화를 3대 원칙으로 집중 투자를 확대한다.

특히, 지필회계에 새롭게 도입된 ‘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’은 중앙정부가 시도별 예산과 표준메뉴판을 제시하면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직접 기획·추진하는 방식이다.

②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할 '지역의사선발전형' 학생(490명)에게 등록금·주거비 등을 지원하고, ‘계약형 지역필수의사’ 참여지역을 전국으로 확대(6개 시도, 136명 → 서울 제외, 448명)하며, ‘시니어의사’ 채용 지원을 확대(160→220명)하는 등 지역 의료인력을 확충한다.

③ 국립대병원을 5극3특 지역의료 주축병원으로 집중 육성하여 빅5 수준으로 역량을 강화하고,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진료시설 구축 등 인프라 보강 및 필수의료 운영비 지원을 통해 포괄 2차 종합병원 수준으로 진료 역량을 강화한다.

④ 모자의료센터 전문인력 특별수당(전문의 월 1천만 원, 전공의 월 500만 원, 서울 제외)을 지원하고, 중증모자의료센터를 확대(2→4개소)한다. 아울러,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보험료 지원대상을 전국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전담의까지 확대하여 안전한 필수의료 진료환경을 조성한다.

셋째, 지역사회 통합돌봄 현장 안착과 모두의 돌봄을 강화하고,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를 대폭 개선한다.

① 의료·요양·돌봄 통합지원 지역특화서비스 대상자를 노인에서 장애인까지 확대하고, 의료취약·인구감소지역은 1.2~1.5배 가산 지원한다.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인구감소지역에 주야간·단기보호 및 방문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립 '취약지돌봄센터' 30개소를 신설한다.

②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기존 중증장애인(3급 단일 제외)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대폭 확대(+26.7만 명)한다.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을 확대(+9천 명)하고 단가를 4.0% 인상(17,960원)한다. 또한 장애인 편의 시설 모니터링(500개) 등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(+2,600개)한다.

③ 발달장애인 청소년 대상 방과후 활동서비스(+1.5천 명)와 성인 대상 주간활동서비스(+5천 명)를 확대하고,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통합돌봄 서비스도 확대(24시간 +6개소, 주간개별 +15개소)한다. 장애 영유아 돌봄인력 수당(시간당 영아 2천 원, 유아 1천 원)을 신설하며, 발달재활서비스 대상(+6천 명)을 확대한다.

④ 사회서비스형 및 민간형을 중심으로 노인일자리 118만 개(+2.8만 개)로 확대하고, 안전전담인력을 1,341명(+728명)으로 대폭 증원한다. 치매환자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확대한다.

⑤ 12개 유형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00% 준수(7.0% 중, 1조 540억 원)하고, 저연차 종사자 인건비를 추가 인상한다. 정부 보조 민간위탁사업 종사자 중 고강도 직군 10종에 대해 공통처우개선율에 1%p를 추가 적용한 4.9% 인상한다.

4 넷째, 아동·청년 등 미래세대의 회복과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.

① 가족돌봄·고립은둔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지원을 확대(+6천 명)하고, 청년 생활권 내 일상회복·사회참여 지원기관 120개소를 신규 확충한다. 학대피해아동 영유아·장애아동 특화쉼터(18개소)를 확충하고, 보호대상아동 그룹홈 인건비를 인상(8.1% 중)하며 원가정 복귀 지원기관을 본격 운영한다.

② 만 18세('09년생, 45.1만 명) 도래 모든 청년이 최초 연금 가입 이력을 생성하도록 '국민연금 첫 보험료'(1개월분, 약 4.2만 원)를 신규 지원한다.

③ 청년 회복·성장, 청년특화 자활사업, 노인일자리 안전관리자, 바이오·의료 전문인력 등 보건·복지분야 청년 일자리를 2만 개로 확대(+9천 명)한다.

④ 첫만남이용권·부모급여·아동수당을 **아이맞이지원금***과 **아동기본수당****으로 통합한 출산·양육 패키지를 신설한다.

* (아이맞이지원금) 출생 순위에 따라 첫째 1,000만 원, 둘째 1,200만 원, 셋째 이상 1,500만 원 지급 (1년간 4회 분할). 인구감소지역 등 우대지역은 500만 원 추가 지급

** (아동기본수당) 0~12세 아동(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)에게 매월 20만 원 지급하되 현금으로 10만 원, 지역사랑상품권으로 10만 원을 지급(우대지역은 매월 30만 원 지급하되, 현금으로 15만 원, 지역사랑상품권으로 15만 원 지급, 0~1세 가정교육 시 매월 30만 원 추가)

⑤ 미숙아·선천성이상아 출생 시 의료비 지원을 확대(최대 2,700만 원)하고, 가임력 검사비 지원(+ 4만 명) 및 난임·임산부 심리상담센터(+ 2개소)를 확충한다. 또한, 운영기간을 확대(5주→12주)하여 방학에 지역아동센터·다함께돌봄센터에 방문하는 아동에게 돌봄과 점심·저녁 식사를 제공한다.

다섯째, 보건·복지 AX 및 바이오 혁신을 추진한다.

① 재가 및 시설 돌봄 현장에 돌봄로봇을 배치하고, 가정용 돌봄로봇 상용화를 지원(377억 원)한다. R&D를 신규 투자(145억 원)하여 돌봄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, 복지·돌봄 마이데이터 및 개방형 플랫폼 등 데이터기반 구축 및 AI 리터러시 교육을 추진한다.

② 취약지 일차의료 AX 패키지, 구급대-병원 간 실시간 연계 응급 통합 AI 플랫폼, 「나의 건강기록(PHR)」 기반 AI 및 의료영상 QR 공유(387억 원),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허브 소버린 AI(349억 원) 구축 등 기본의료 AI를 추진한다.

③ 바이오헬스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청년 창업기업(13개사)에 바우처를 신규 지원(50억 원)한다. 피부 빅데이터 규모 확대 및 플러그십허브(해외 체험 판매장) 설치 확대 등 K-뷰티 경쟁력을 강화하고,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 기능을 포함한 K-헬스케어 통합허브 플랫폼을 구축한다.

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“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 안전매트를 더 두텁게 하고, 지역사회 돌봄은 넓히면서, 지역·필수·공공의료를 확충하여 어디에 살든 질 높은 의료를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삶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2027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”라고 밝히며, “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복지국가 구현에 보건복지부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”라고 언급했다.

아울러 “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·협의하고, 국민의 의견에 더 귀 기울이며,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”라고 강조했다.

<붙임> 1. 2027년 보건복지부 5대 중점 투자
2. 2027년 기초연금 개편방안

< 담당부서 >

담당 부서 <총괄>	재정운용담당관	책임자	과 장	박은정	(044-202-2320)
		담당자	서기관	박지민	(044-202-2321)
<생계급여> <긴급복지>	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과	책임자	과 장	박민정	(044-202-3050)
		담당자	사무관	백수민	(044-202-3066)
		담당자	사무관	박영호	(044-202-3053)
<의료급여>	복지정책관 기초의료보장과	책임자	과 장	강준	(044-202-3090)
		담당자	사무관	배윤영	(044-202-3097)
<기초연금>	연금정책국 기초연금과	책임자	과 장	박나연	(044-202-3680)
		담당자	사무관	김관호	(044-202-3681)
<자활사업>	복지정책관 자활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수환	(044-202-3070)
		담당자	사무관	김태경	(044-202-3073)
<그냥드림>	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자원과	책임자	과 장	권혜나	(044-202-3250)
		담당자	사무관	이홍남	(044-202-3251)
<사회적 고립> <위기가구 발굴> <희망드림꾸러미>	복지행정지원관 지역복지과	책임자	과 장	서일환	(044-202-3120)
		담당자	사무관	정진경	(044-202-3136)
		담당자	사무관	이형주	(044-202-1753)
<국가자살대응실> <자살예방상담전화>	정신건강정책관 자살예방정책과	책임자	과 장	박재우	(044-202-3349)
		담당자	서기관	조성원	(044-202-3892)
		담당자	사무관	주정민	(044-202-3899)
<마약 중독 치료>	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관리과	책임자	과 장	송명준	(044-202-3870)
		담당자	주무관	이주언	(044-202-3875)
<지필회계>	지역필수의료정책관 지역필수의료총괄과	책임자	과 장	이영재	(044-202-1920)
		담당자	사무관	전원호	(044-202-1911)
<지역주도 공백해소>	지역필수의료정책관 지역의료정책과	책임자	과 장	강민구	(044-202-2680)
		담당자	사무관	이경은	(044-202-1931)
<지역의사>	지역필수의료정책관 지역의료인력양성과	책임자	과 장	민차영	(044-202-1960)
		담당자	사무관	이수빈	(044-202-1961)
<국립대병원>	공공의료정책관 국립대병원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도균	(044-202-2510)
		담당자	사무관	이재혁	(044-202-2501)
<지방의료원>	공공의료정책관 공공의료정책과	책임자	과 장	백형기	(044-202-2530)
		담당자	사무관	이영은	(044-202-2541)
<고위험 산모·신생아>	지역필수의료정책관 필수의료정책과	책임자	과 장	백경순	(044-202-3340)
		담당자	사무관	조영대	(044-202-1945)
<의료사고 안전망>	보건의료정책관 의료기관정책과	책임자	과 장	신현두	(044-202-2470)
		담당자	사무관	이보미	(044-202-2474)
<통합돌봄>	통합돌봄지원관 통합돌봄사업과	책임자	과 장	변성미	(044-202-3590)
		담당자	서기관	윤종현	(044-202-3592)

<취약지돌봄센터>	통합돌봄지원관 통합돌봄정책과	책임자	과 장	정혜은	(044-202-3580)
		담당자	서기관	이라향	(044-202-3581)
<장애인연금> <장애인일자리>	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	책임자	과 장	박문수	(044-202-3280)
		담당자	사무관	방재호	(044-202-3321)
		담당자	사무관	안미경	(044-202-3328)
<발달장애인> <장애인활동지원> <장애아동가족>	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	책임자	과 장	이고운	(044-202-3340)
		담당자	서기관	임선호	(044-202-3352)
		담당자	사무관	최용혁	(044-202-3341)
<노인일자리>	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	책임자	과 장	신명희	(044-202-3470)
		담당자	사무관	김현수	(044-202-3477)
<치매 관리>	노인정책관 노인건강과	책임자	과 장	최승현	(044-202-3530)
		담당자	서기관	김미경	(044-202-3531)
<청년일자리> <인건비가이드라인>	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일자리과	책임자	과 장	반윤주	(044-202-3270)
		담당자	사무관	이찬희	(044-202-3266)
		담당자	사무관	신춘호	(044-202-3276)
<회복청년>	인구아동정책관 청년정책팀	책임자	과 장	이화영	(044-202-3701)
		담당자	사무관	주현정	(044-202-3702)
<아동기본수당>	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	책임자	과 장	박찬수	(044-202-3410)
		담당자	사무관	정윤아	(044-202-3429)
<청년 첫 보험료>	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	책임자	과 장	전명숙	(044-202-3450)
		담당자	사무관	신하늘	(044-202-3613)
<양육지원> <원가정복귀> <방학틈새돌봄>	인구아동정책관 아동보호자립과	책임자	과 장	구미정	(044-202-2875)
		담당자	사무관	안유리	(044-202-3441)
		담당자	사무관	정호진	(044-202-3432)
		담당자	주무관	신동학	(044-202-3444)
<아이맞이지원금> <가임력 검사> <영유아 의료비>	인구아동정책관 출산정책과	책임자	과 장	최영준	(044-202-3390)
		담당자	사무관	류지은	(044-202-3397)
		담당자	사무관	이은경	(044-202-3403)
		담당자	사무관	곽영남	(044-202-3393)
		담당자	사무관	김상태	(044-202-3399)
<학대피해아동>	인구아동정책관 아동학대대응과	책임자	과 장	양진혁	(044-202-3380)
		담당자	사무관	한진택	(044-202-3382)
<복지돌봄 AX>	사회서비스정책관 복지돌봄인공지능정책과	책임자	과 장	서민수	(044-202-3240)
		담당자	서기관	김현철	(044-202-1511)
<의료정보교류>	첨단의료지원관 의료정보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민정	(044-202-2610)
		담당자	주무관	이에나	(044-202-2606)
<일차의료AX> <데이터허브>	첨단의료지원관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	책임자	과 장	박정환	(044-202-2620)
		담당자	사무관	권용진	(044-202-2947)
		담당자	사무관	윤현준	(044-202-2635)
<청년유니콘>	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건훈	(044-202-2320)
		담당자	사무관	구재관	(044-202-2911)
<화장품산업>	보건산업정책국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	책임자	과 장	김유라	(044-202-2940)
		담당자	사무관	김소연	(044-202-2945)
<외국인환자>	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해외진출과	책임자	과 장	주 철	(044-202-2980)
		담당자	주무관	이정민	(044-202-2984)

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

사회 안전매트는 더 두텁게, 지역 의료·돌봄은 더 든든하게

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 안전매트를 강화합니다.

- ▶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고 6.7% 인상, 월 13만9천원 더 지원(4인가구)
- ▶ 중증장애인 생계·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
- ▶ 기초연금 저소득층 중심 하후 차등지급, 부부감액비율 축소, 직역연금 수급자 배우자 지원
- ▶ 위기 장후 포착 시 생계지원 우선지급(30만원)

지역·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투자를 확대합니다.

- ▶ 「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(1.26조원)」 신설
- ▶ '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' 신규 도입
- ▶ 지역의사제(490명) 시행 및 '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(전문의)' 전국 확대
- ▶ 5극3특 지역 국립대병원 집중 육성
- ▶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인프라 지원 등 역량 강화



모두가 누리는 보건·복지 AX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합니다.

- ▶ 복지·돌봄 로봇 도입·실증 및 R&D 지원
- ▶ 바이오헬스 청년 유니콘기업 육성 및 K-뷰티 경쟁력 강화

- ▶ 전국민 AI 기본의료(일차의료 AX, 환자 중심 AX) 구축
- ▶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허브 및 한국형 의료AI 개발 추진



아동·청년 등 미래세대의 회복과 성장을 지원합니다.

- ▶ 아이맞이지원금(최대 2천만원) & 아동기본수당(월 20~30만원) 도입
- ▶ 만 18세 청년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(1개월분, 약 4.2만원) 신규 지원
- ▶ 청년 회복지원(+6천명) 및 보건복지분야 청년일자리 2만개 확충
- ▶ 미숙아·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확대 (최대 2,700만원) 및 방학 중 초등 틈새돌봄(12주)

통합돌봄의 현장안착과 돌봄부담 완화를 지원합니다.

- ▶ 통합돌봄 지역특화서비스 확대 및 인구감소 지역 공립 「취약지 돌봄센터」 30개소 신설
- ▶ 장애인연금 3급 단일까지 확대(+26.7만명),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(+9천명)
- ▶ 노인일자리 역대 최대 118만개 확충(+2.8만개)
- ▶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% 반영

1. '27년 기초연금 개편(안)

- ☐ (선정기준) 노인 70% 지급하는 목표수급률 유지
- ☐ (하후 차등지급) 현행 정액급여 → 개편 소득수준(3개) 따라 추가지원
 - '노인 규모 30%와 45%' 기준으로 세 구간을 나누어 차등 지급
 - * '기준중위소득 20%와 40%' 수준

< 하후 차등지급 구조 >

(노인 하위)	현행	제도 변경 시
	'26년	'27년
45~70% (290만명)	35만원	35만원
30~45% (174만명)		35.9만원 (물가연동)
0~30% (348만명)		38만원 (+3만원)

- ☐ (부부감액) 현행 부부가구 수급자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각각 20% 감액
→ 개편 저소득층(0~45%) 감액비율 10%로 축소, 총 234만명
 - * (하위 0~30% 부부가구) 56만원('26) → 68.4만원('27), +12.4만원 추가지원
 - (하위 30~45% 부부가구) 56만원('26) → 64.6만원('27), +8.6만원 추가지원
- ☐ (지역연금) 현행 지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소득·재산이 낮아도 원천적 배제
→ 개편 저소득층(0~45%) 기초연금 지급, 총 11만명
 - * '26년 0원 → '27년 하위 구간에 따라 최대 38만원 혜택

2. '27년 기초연금 예산(안)

- '27년 예산액 : '26년 23.1조원 → '27년 25.7조원(+2.6조원, 11%)

3. 향후 계획

- 연내 입법 완료* 및 '27.4월 개편방안 시행**
 - * 하후 차등지급, 부부감액, 지역연금 법 개정 필요
 - ** 지역연금은 지역연금 수급자의 정보연계가 필요한 사항으로 '27.7월 시행